동북아연구, 41권 2호(2026), © 2026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pp.33~72
http://dx.doi.org/10.18013/jnar.2026.41.2.002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 밑그림*

김학노(영남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 삶의 공간 확대를 지향하는 지정학적 상상을 시도한다.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의 기본 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고 우리는 이들을 이어준다는 '가교국가론'을 기각한다. 대신에, 한국 스스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복합화 전략'(신범식)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대륙과 해양 양면 전략을 취하되 특히 대륙 진출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대륙 진출의 밑그림을 그린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승·발전시킬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안한다. 좀더 가까운 목표로는 남만주와 연해주 및 조선(북한) 북부 지역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공생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해양 방면의 구상을 시도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되 우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지 않도록 한다. 좀더 가까운 목표로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를 하나의 지중해로 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 구상을 수립·전파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지정학적 상상, 가교국가론, 대륙세력, 해양세력, 평화·공생공간, 동북아 지중해

* 이 연구는 2025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소중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www.kci.go.kr

www.kci.go.kr

"나는 초등학교 입학한 후의 첫 방학에 만난 해방을 근 70년 만에 광복절로 고쳐 맞으며 그 여름의 열기 속에서 좀 과감한 꿈을 꾸었던 것 같다. 그러나 '중화굴기'를 외치며 세계 곳곳에 오성홍기를 휘날리고 있는 중국, 전쟁의 범죄를 모르쇠하고 피해국들의 항의를 되받아치고 있는 일본 극우파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수난의 역사로 점철된 운명을 뒤집어, 우리의 지정학적 관점을 강대국을 잇는 건널목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가운데에서 새로운 능동적 역할을 발휘할 알박이 땅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결기가 솟은 것 같다. 이 도전적 소망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리라. 오늘의 한국을 주도하는 세대의 자부심과 그것을 뒷받침할 지도자들의 능력이 문제일 것이다."[1]

Ⅰ. 문제제기

냉전이 종식된 지 40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 등 지구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지정학적 상상에서도 경쟁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에 이어 아예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한다.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주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개념과 함께 일본-인도-호주-미국(하와이)을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전개한다. 푸틴의 러시아는 서쪽으로 나토의 동진에 대항하는 한편, 신동방정책을 표방하여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구성하여 중앙아시아를 공략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아른거린다.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 모두에서 "강대국의 공간 지배 전략" 또는 "개념전쟁"[2]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1) 김병익, "[특별기고] 한반도의 지정학: 건널목에서 알박이로," 『한겨레』 2014년 8월 21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191.html(검색일: 2026.1.23).
2) 손열, 『개념전쟁: 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까지, 강대국의 공간 지배 전략과 한국의 선택』,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3.

www.kci.go.kr

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정학적 상상이 있는가?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자칫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줄이고 우리가 계속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구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의 밑그림을 그린다. '지정학적 상상'이란 지정학적 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 비전과 전략적 공간 개념의 수립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imagination)'이 아닌 지적인 통찰(intellectual foresight)'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상상(vision)'을 뜻한다.[3] 이 글은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는 한편 '평화·공생외교' 담론을 기조로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생공간의 창출을 모색한다. '평화·공생외교'는 강대국들의 지정학 담론에 대하여 김태환이 우리의 대항지정학 담론으로 제안한 '평화외교' 개념과 백영서가 동아시아 담론에서 강조하는 '공생'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4] 평화와 공생 기조는 우리의 안보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평화·공생의 담론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을 지정학적 상상의 주체로 삼는다. 우리사회 내 지정학 담론은 한국과 한반도를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한반도 및 한겨레의 지리적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이 글은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에 입각해서 상상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한국을 하나의 완성된 국민국가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영토 위에 국가와 국민을 건설한 주권국가로서 80년 가까이 존속해왔고 유엔에도 각각 가입해 있다. 이같은 엄연한 현실에 기반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시대'나 '분단체제'로 보는 대신에, 남과 북이 이미 각자 완성된 국민국가로 분립한 상태로 보는 '분리-통합'의

3) 고성빈,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비판이론의 탐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 28.

4) 김태환, "대항지정학으로서의 평화외교."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253-262; 백영서,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파주: 나남, 2022, pp. 25-26. '평화외교' 담론의 원형은 구갑우의 '평화국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10호, 2007, pp. 17-48;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24권3호, 2008, pp. 95-124 참조.

www.kci.go.kr

시각을 견지한다.[5]

이 글의 주요 주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의 기본 방향을 모색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고 우리는 이들을 이어준다는 '가교국가론'을 기각한다. 대신에, 한국 스스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복합화 전략"[6]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륙 진출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대륙 진출의 밑그림을 그린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승·발전시킬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안한다. 좀더 가까운 목표로는 남만주와 연해주 및 조선(북한)의 북부 지역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공생지역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만주-조선(북부)-연해주의 공생공간을 이 글에서는 '만선련'으로 줄여서 부른다. 셋째, 해양 방면의 구상을 시도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되 우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되지 않도록 한다. 좀더 가까운 목표로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를 하나의 지중해로 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 구상을 수립·전파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Ⅱ. 상상의 기본 방향

우리사회에는 (1) 대북정책 및 통일 담론, (2) 외교정책 담론, (3) 동아시아 담론 등 지역 관련 논의가 많다. 각종 대북정책 및 통일론, 중립화(통일)론, 한반도 비핵(지대)화론 등은 대부분 시야가 한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교정책담론이나 국제정치적 구상 또한 많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견국 외교론'과 '글로벌 중추국가론', 한국이 강대국이 되어 마땅하다는 '강대국론' 등이 한창이다. 이들은 지정전략과 연관성이 있지만, 본격적인 지정학적 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동아시아 담론은 대개 서너 부

5)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서울: 사회평론, 2014 참조.
6) 신범식, "북방정책과 한국·소련/러시아 관계."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02-111.

www.kci.go.kr

류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특히 창비 중심의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담론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된 동아시아 담론은 오늘날 열기가 다소 식은 듯하나, 꾸준히 소환되고 있다.[7] 그러나 이 담론은 이상적인 비전 제시에 치우치고 규범적인 경향이 강하다.[8] 무엇보다 무엇이 동아시아인지, 왜 동아시아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9] 동아시아를 실체적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체제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10] 여러모로 창비의 동아시아 담론은 지정학적 상상보다는 성찰적 비판담론, 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상상이라고 함이 더 적합하다.

이 글은 기존 담론들 대신 역대 정부의 지정학적 구상의 선별적 계승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을 시도한다. 기왕의 정부 정책을 부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지속성을 살리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다. 우선 (1) 한반도 중심의 '가교국가론'에서 벗어나서 (2) 대륙과 해양의 복합화 전략을 취하되 (3) 대륙 진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대륙 중심 육해복합화' 전략을 구상하자고 제안한다.

1. 가교국가론 기각

〈표 1〉은 역대 6공화국 정부의 지정학적 구상을 요약한 것이다. 지정학적 구상이 분명하지 않았던 김영삼 정부는 제외했다. 역대 정부의 구상은 (1) 가교국가론, (2) 북방정책 또는 대륙지향 구상, (3) 남방정책 또는 해양지향 구상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세 유형은 정책의 중심을 기준으로 나눈 구분일 뿐이다. 실제로는 대부분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 요충지론에 입각한 가교국가론이 역대 정부 구상의 공통분모로 작동한다.

7) 백영서,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
8) 고성빈,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p. 89, 145.
9) 윤여일, 『동아시아 담론: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파주: 돌베개, 2016, p. 30.
10) 백원담, "동아시아 담론 비판: 왜 동아시아인가?" 『실천문학』 겨울호 (통권 56호), 1999, p. 328.

www.kci.go.kr

〈표 1〉 6공화국 역대 정부의 지정학적 구상

역대정부	지역구상	지리적 범위	핵심정책	지정학적 성격
노태우	북방정책	소련·중국 등 구사회주의권 및 한반도	한소/한중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대륙 지향
김대중	햇볕정책 동아시아	한반도 동아시아	철의 실크로드 동아시아 공동체	대륙 지향 해양 지향
노무현	동북아중심국가 구상	동북아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대륙 지향 대륙-해양 가교
이명박	신아시아 외교 구상	전 아시아	FTA 체결 확대 한중일 정상회담	해양 확장
박근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동북아평화협력 포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륙-해양 가교 대륙 지향
문재인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러시아, 중앙아 아세안 등 동남아	남북관계 개선 우선 아세안 동남아 외교 격상	대륙 지향 해양 확장
윤석열	인도태평양 전략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등 망라*	포괄적 지역전략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해양 확장

출처: 김성배 2023, "지정학 전통과 한국의 지역 구상 검토: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전략보고, No. 223, p. 11. 일부 수정, 보완.

* 유라시아 언급 없음.

**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함.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을 새롭게 그리는 출발점으로 이 글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론을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교국가론은 한반도가 공간적으로 중심에 있다는 사고에 입각해 있는데, 이는 우리의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하다. 가교국가론은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해 거의 최초로 고민한 표해운이 지적했듯이, 한반도는 주변적이거나 부속적인 위치가 특징이다.[11] 한반도의 중심 위치론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깊이 스며든 "주변의식의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12] '동북아시아' 자체가 한반도를 중심 위치에 놓고 사고하는 지역 개념이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처럼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지도 않는다.[13]

11)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조선의 과거·현재와 장래』, 서울: 건국사, 1947, pp. 11-13.

12)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p. 164.

www.kci.go.kr

둘째, 한반도 가교국가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역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경유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고 교량의 역할을 한다는 발상은 매우 뿌리깊이 스며 있다.[14] 대륙과 해양의 연결은 굳이 반도가 아니라 모든 연해지역이 잠재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한반도처럼 반도의 종심이 길면 반도의(대륙-해양 양방면으로의) 연해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해양세력이 동북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경유하기보다는 우회해서 신의주나 원산 또는 나진 등에서 직접 진출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셋째, 가교국가론은 자칫 우리를 강대국 갈등의 최전선에 놓음으로써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연해지대로서 한반도는 분리 기능과 통합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반도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연해지역이기 때문이다. 분리와 통합 기능 중 후자가 강하면 반도국은 로마제국처럼 강성해질 수 있다.[15] 동시에 이웃 강대국이 반도의 통합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다. 임진왜란이나 청일·러일 전쟁에서 보듯이 교량국가가 침략의 교두보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교국가론은 이웃 강대국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교국가론은 일제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주의 사관의 '징검다리론'과 이어져 있다.[16] 반도사관의 유물이다. 가교국가론은 우리를 주위 강대국 협력의 중심에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이웃한 강대국 갈등의 중심으로 만들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한

13) 윤여일, 『동아시아 담론』, p. 316

14) 예를 들면, 김원수,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한국의 시각." 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편, 『동북아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담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p. 75; 문정인,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동북아 협력 구상." 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편, 『동북아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담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p. 151; 송재익,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27권3호, 2021, p. 108;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증보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p. 261; 박명림, "IT시대의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 동아시아 평화·인권·화해 중추국가의 비전과 구상,"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http://m.kisdi.re.kr/mobile/repo/res_view.m?key1=9829&key2=0&key3=&category=30(검색일: 2019.3.18), pp. 46-49.

15)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서울: 문영사, 2000, p. 260.

16) 박영한, "분단국토와 남북한의 비교지리학 서설." 『지리학논총』69호, 2023, p. 74.

www.kci.go.kr

국이 곧 한반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반도가 다리라면, 그것은 '끊어진 다리'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라고 해서 한국이 가교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조선(북한)에 의해 대륙과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한다는 구상은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 들면 현실에 발붙이기 어렵다. 요컨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남북한이 적대적 대치를 하는 한 가교 기능은 발휘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교국가론은 우리의 주동성을 적극 정립하지 않는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가교국가론에서 우리의 역할은 대륙과 해양의 세력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에 그친다. 우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보다 한반도를 가교로 사용하려는 주변국가들의 의지가 더 중요해진다. 우리 입장에서 지정학적 상상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국이 통과 지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17] 이 글의 제사(題辭)에서 김병익이 토로하듯, "우리의 지정학적 관점을 강대국을 잇는 건널목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가운데에서 새로운 능동적 역할을 발휘할 알박이땅으로 만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18] 우리 강토를 경유지가 아니라 출발지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뻗어 나가야 한다.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건널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대륙세력이든 해양세력이든 되어야 한다.

2. 대륙과 해양 양면 전략

한반도는 반도이기 이전에 러시아의 연해주와 같은 연해지대다. 한국도 연해지대다. 한반도는 스파이크만이 강조한 림랜드(rimland)에 속한다.[19] 림랜드는 대륙과 해양 양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양 방면으로 뻗어 나갈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신범식이 제기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복합화전략"을 지정학적 상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20] 이는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

17) 이 점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최지용씨로부터 배운 것이다.
18) 김병익, "한반도의 지정학."
19) Spykman, Nicholas John, The Geography of the Peace. Edited by Helen R. Nicholl. [S.I.]: Archon Books, 1969.
20) 신범식, "북방정책과 한국·소련/러시아 관계." pp. 102-111.

www.kci.go.kr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전제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맞부딪친다는 (신)냉전적 사고는 대륙과 해양 진출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만든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 양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 다만 양 방면으로 뻗어가되, 바다와 대륙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해양세력화 주장과 그 문제점을 먼저 살핀 다음, 대륙세력화에 우선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해양세력화론에는 (1) 지리적 및 지정학적 고려에 의한 논의와 (2) 이념이 앞선 논의가 있다. 첫째, 지리적·지정학적 조건에 입각한 한국의 해양세력화 주장이다. 지리에 근거한 해양세력화론의 예로, 임덕순은 한국이 3면이 바다이고 최대 대양인 태평양에 인접한 점, 최대 대륙인 유라시아에 접해 있는 연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업과 어로 기술이 발달한 점 등을 근거로 해양강국화를 주장한다. 특히, 이웃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토, 인구, 자원 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21] 지정학적 고려에 입각한 해양국가론의 예로, 김종두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북쪽 대륙으로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유일한 대안은 해양 진출이라고 주장한다.[22]

한국이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의 길이 막혀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양에서 돌파구를 찾자는 논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박정희가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대륙으로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해양을 활용하여 세계로 진출한 전략이었다. 다만, 북한과의 적대적 대치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해양으로의 진출밖에 길이 없다는 논지는 다소 소극적인 생각이다. 막혀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막힌 곳을 뚫을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우리가 최대 대양인 태평양에 인접해 있다는 인식은 절반쯤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한반도의 동해는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 및 사할린 섬에 의해서 사실상 막혀 있다.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태평양에 진출하려 해도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또 그곳에서 대만에 이르기까지 펼쳐 있는 샤츠난 제도와 류큐 제도, 또는 난세이 제도가 버티고 있다. 동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와 남해도 일본 열도에 의해서 막혀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대양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 보이지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의해서 동남방으로 방파제처럼 둘러

21)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이론과 실제』, 2판, 서울: 법문사, 1997, pp. 190-191, 390-392.
22)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pp. 193-195.

www.kci.go.kr

싸여 있는 것이다.[23]

둘째, 이념적 고려나 동맹 논리가 앞선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소위 '가치외교'가 이에 해당한다.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조에서 한국의 해양세력화나 해양세력과의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논의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같은 입장을 학술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은 아마도 박철희의 논의다. 박철희는 (1)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고, (2) 북한과 적대적 대치 중에 있으며, (3) 미국의 대중국 동맹의 일원으로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미동맹의 절대적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논의들—가령 한국은 미국에게 미일동맹의 부속에 불과하다는 견해, 또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지정학적 환상'이나 '계산 착오'라고 비판한다. 그같은 논의가 미국에서 나와도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한다.[24]

가치외교 담론은 지정학적 계산보다 이념이나 동맹 논리가 앞서는 논의다. 박철희가 자신의 논의를 지정학적 분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역시 이념과 동맹 논리가 앞서 있다. 오늘날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라는 견해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25] 이념이 앞선 논의가 갖는 동맹정치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논의들은 해양과 대륙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반도가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편을 확실히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 미중이 대립하던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밀로 하고 중국과 협력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26]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경쟁 속에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할 필요가 있다. 양자택일론은 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3)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p. 23.
24) 박철희,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한국국가전략』 통권 15호, 2021, pp. 47-62.
25) Hafeznia, Mohammad Reza. "Active Geostrategic Faults in the World." *Geopolitics Quarterly,* Vol. 12, No. 4, 2017, p. 11 참조.
26) 오타 야스히코 지음, 임재덕 옮김, 『2030 반도체 지정학』, 서울: 성안당, 2022, p. 349.

www.kci.go.kr

또한, 이같은 시각 자체가 한반도를 실제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미중 대결을 해양과 대륙 세력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이 글은 미중 패권경쟁이 주로 해양세력 사이의 충돌이라고 본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륙세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세력화한 나라들이다.[27] 해양세력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로 충돌하는 지점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다. 한국과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해양에서 대치하는 제1열도선 안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열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연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미중이 힘을 겨루는 주요 지점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및 인도양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합동 공해전투(joint air-sea battle) 개념을 발전시킨 것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주전장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28]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 세력 충돌의 최전선으로 보는 시각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그러한 시각 자체가 한반도를 실제 미중 대결의 전선으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이 해양국가화를 도모하면서도 대륙진출의 꿈을 잃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대륙진출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대륙진출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륙으로의 진출은 우리의 잃어버린 대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한 연해지역이며, 한국은 연해성을 상실한 '막힌 섬'에 불과하다. 한국은 한쪽이 막힌 연해지대다. 연해지역은 본래 해양과 대륙 양 방면에서 공격받을 수 있지만 양 방면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해양과 대륙의 문화와 문물이 교류되고 교차하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한국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연해성을 반쯤 상실한 상태다. 김대중은 이를 가리켜 "비륙비도(非陸非島)"라고 표현했다. 섬나라가 아닌데 그렇다고 대륙과 연결된 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를 반도국가라 하는데, 우리는 반도가 아닙니다. 대륙으로 가야 반도인데 못 가지 않습니까? 비륙비도(非陸非島), 육지도 아니고 섬도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진출해야 합니다."[29]

---

27) 김학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집 2호, 2019, pp. 5-30.
28) 신성호,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파주: 21세기북스, 2025, p. 396.

www.kci.go.kr

한반도 북부를 점유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우리는 연해지역이 가지고 있는 양방향성을 상실해 있다. 남북의 분립 이후에도 북한은 바다와 육지 양 방면으로 나아가는 연해성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륙과의 연결성이라는 연해성의 반쪽을 상실한 상태다. 이 점에서 현재의 한국은 연해지역이면서 연해성의 중요 부분을 상실한 '지정학적 결손국가'다. 우리가 이같은 비정상을 극복하고 림랜드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연해성의 반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먼저 육지를 평정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지리 조건을 중시한 고전지정학자 중에서 대륙세력을 중시한 맥킨더(Halford Mackinder)와 해양세력을 중시한 마한(Alfred T. Mahan)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마한과 맥킨더 모두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처한 대륙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일치한다.[30] 마한에 따르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 내 국가들에 비해 영국이 해양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대륙 내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31] 맥킨더는 영국과 미국이 '식민지→대륙→도서(섬)'의 단계를 거친 공통점을 강조한다.[32] 대륙(영국의 경우 브리튼 섬)을 평정한 이후 비로소 해양국가(섬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우리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해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육지에서 인접하고 있는 국가와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육지에서의 방어에 집중하는 상태에서 바다로 뻗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해양세력이 되고 바다로 뻗어 나가고자 해도 그 전에 먼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종합하면, 한국은 신범식이 주장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복합화전략'을

29)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 김대중 전 대통령 주요 연설·대담 1998~2004』, 파주: 돌베개, 2004, p. 198; 김대중,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파주: 한길사, 2024, p. 683 참조.

30) 김동기, 『지정학의 힘: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세계사』, 파주: 아카넷, 2020, p. 36, 56 참조.

31) 마한, 알프레드 세이어 지음,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서울: 책세상, 1999, p. 352.

32) Mackinder, Harold J,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19, p. 85.

www.kci.go.kr

택하되, 대륙 진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륙과 해양 진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각해질수록 우리는 위험을 분산하는 헤징(hedging)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중 대립의 최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 대륙에 한 발 들여 놓아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상상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진출 방향은 대륙이다. 해양 진출에 주력하기 이전에 육지를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

Ⅲ. 대륙 방면 상상

대륙 중심 육해복합화 전략은 한국을 "알박이"로 해서 대륙과 바다로 뻗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다민족·다문화 공생공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륙 진출의 큰 그림은 중국과 몽골,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통해 우리의 경제·문화 생활권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여기서는 역대 정부 정책 중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승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기본적으로 서진(西進) 구상이다. 좀더 가까운 목표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남만주지역(특히 연변) 그리고 북한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만주-조선-연해주(이하 '만선련'으로 약칭)의 공생공간 창출과 확대를 제안한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계승

한국의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부침을 겪다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의해 다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노태우 정부 이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북방정책으로서 우리의 상상의 지평을 유라시아 대륙 전반으로 넓히고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3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

33) 장덕준,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아관파천에서 신북방정책까지』, 서울: 역사공간, 2021, p. 300, 354.

www.kci.go.kr

럽을 다양한 교통과 에너지 망으로 연결하여 평화와 번영의 대륙을 구축하자는 거대 구상이다.[3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북정책을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에 머물지 않고 대러 경제협력과 연결시켰다.[35] 우리의 경제활동을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히고 동시에 교류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큰 그림이다. 이는 향후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36] 오늘날 세계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구상으로서도 적합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속성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아래 (1)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2) 신남방정책, (3) 신북방정책 등 3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37] 대륙 지향의 신북방정책은 5개 분야에 걸쳐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는 등 상당히 구체성을 띠었다. 특히 (1)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연결, 전력망 구축 등)과 한-EAEU 간 자유무역(FTA) 추진, (2) 중몽러 경제회랑(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과의 연결을 꾀한 점이 눈에 띈다.[38]

이 글은 한국의 대륙진출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륙지향 정책을 이어받되, 그 중에서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계승할 것을 제안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신북방정책에 비해 유라시아 대륙을 지칭하는 점에서 좀더 구체적이다. 또한, 북한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북방정책이 원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권으로의 진출을 도모했지만, '북방'이라는 개념이 만주와 시베리아 및 북한 등으로의 북진을 의미하여 북한에 대해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북방에 머물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유럽을 모두 포함하는 유라

34) 김성배, "지정학 전통과 한국의 지역 구상 검토: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전략보고, No. 223, 2023, p. 10; 이강국, 『일대일로와신북방신남방정책』, 파주: BookStar, 2018, p. 143.

35) 제성훈, "북방정책35년 평가와 뉴노멀 시대 한·러 협력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27권, 2023, p. 46.

36) 장덕준, "'북방정책' 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재검토 및 새로운 대륙지향 정책을 위한 원형 모색." 『슬라브학보』32권 1호, 2017, p. 301.

37) 최영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7권 2호, 2021, p. 164.

38) 장덕준,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p. 329.

www.kci.go.kr

시아 대륙으로의 서진임을 잘 나타낸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감이 북방정책보다 적어 보인다. 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표방하는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EAEU와 연결성을 찾기가 북방정책보다 더 용이하다.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것처럼,[39]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구상과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2. 만선련 구상

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존재다. 우리는 북한을 경유하여 대륙과 연결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이같은 상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북방길이 막혔다고 해서 대륙 진출의 꿈을 접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남북한 통일이나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의 공간을 연결하는 공동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남과 북의 공동공간 창출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지가 대단히 좁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의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두 국가론의 현실적 수용,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심지어 한국의 핵보유와 상호 억지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고 요원한 일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북한을 우회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을 우회하는 길로는 우선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언급한다. 여기서는 북한의 머리 위 북중러 접경지역에 만선련 평화·공생공간의 형성을 통해 북한을 우회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상상을 시도한다. 만선련 공생공간은 우리의 장기적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심 거점

39) 함명식,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중소연구』 45권 2호, 2021, pp. 7-41 참조.

www.kci.go.kr

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만선련 공생공간 구상은 광역두만강지역(GTR: Greater Tuman Region)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구역인 GTR은 중국 동북3성(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과 네이멍구 자치구, 러시아의 연해주(Primorsky Krai), 몽골의 동부지역, 한국의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시, 울산시 등 동해안을 포함한다.[40] 만선련 구상은 GTR을 단지 경제개발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동북아 평화·공생공간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남만주와 연해주 및 조선의 북부를 연결하여 한겨레와 중국 한족 및 소수민족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함께 상생하는 하나의 문화, 경제 생활권으로 구축한다. 만선련 지역 내 경계 통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서 다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하는 일종의 다국가 공동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이다.

만선련 공생공간 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소다자주의에 입각한 소지역협력 접근으로서, 한국이 참여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만선련 동북아 공생공간은 신범식이 제안한 초국경 소지역 형성 전략에 기반한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국가간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작은 지역 단위로 전개되는 협력사업들에 주목한다. 그 예로 ① 환동해 소지역, ② 광역두만강 소지역, ③ 발해-황해 소지역 등 일곱 가지를 든다.[41] 만선련은 광역두만강 소지역협력(②)을 기반으로 한다. 그만큼 현실적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관련국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다. 광역두만강 소지역의 출발점인 GTI는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이다.[42] 2009년11월 북한이 탈퇴해서 현재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만 회원국이다. 만선련 구상은 GTI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 그 지리적, 기능적 범위를 확대하자는 발상이다. 가령 GTR에 새로운 통합운송 물류체계를 체계화해서 역내 물동량 증가와 관광사

40) 방호경·최보영, "광역두만강지역(Greater Tumen Region)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27권 3호, 2015, p. 164.

41) 신범식,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소다자주의 그리고 동북아 지역정치 변동."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통일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7, pp. 234-242.

42) 원래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아래 시작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2005년에 GTI로 전환했다. 황원규, "환동해경제권의 이해."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 55-57.

www.kci.go.kr

업 및 인적 교류 확대를 꾀할 수 있다.[43] 북한은 GTI를 탈퇴한 이후에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협력에 대한 국내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44] 한국은 GTI의 창립멤버로서 이를 발판으로 만선련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할 수 있다.

둘째, 만선련 지역은 우리가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적합하다. 만선련은 우리와 연고가 많은 지역이다. 만주와 연해주는 일제 시대 우리의 헐벗은 민초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지역이며, 과거 발해의 주무대이기도 하다.[45] 이 지역의 조선족은 (탈북민들과 함께) 한국과 사실상 "자본에 의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 형태로 통일"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46] 만주와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연고가 많은 만큼 우리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적합하지만, 자칫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의 팽창주의로 경계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와 연해주로 진출하되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만주와 연해주'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포함하여 '만선련'을 하나의 공간으로 상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조선의 일부 지역도 함께 포괄하는 초국경 소지역을 구상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주민들이 상생하는 공생공간을 만들고, 이것이 동북아 어느 국가에도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차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만선련 공동공간을 유지·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할 수도 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셋째, 만선련은 우리의 대륙 진출이 중국이나 러시아 및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하는 구상이다. 공동이익의 창출에 의한 공생지역 공간의 창출이다. 우선, 만선련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만선련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네이멍구에 인구 1억 2,000만 명의 시장을 보유한 곳으로, 우리의 경제활동을 크게 넓힐 수 있다.[47] 만선련은 북극해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활용될 수 있으

43) 김엄지·Sergei M. Smirnov·유지원·정다현·서자영, "광역두만지역(GTR)내 새로운 복합물류체계 개발 및 기대효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39권 3호, 2023, pp. 31-55.
44)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서울: 이조, 2020.
45) 윤재운, 『발해로드: 당, 거란, 신라, 일본으로 가는 길』, 고양: 평사리, 2026 참조.
46) 박현옥 지음, 김택균 옮김, 『자본의 무의식: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서울: 천년의상상, 2023, pp. 32-34, 52.

www.kci.go.kr

며,[48]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하여 교통·물류, 에너지, 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49] 만선련은 한반도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물, 신림자원 등 자원과 관광 및 생태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50] 정주영이 일찌감치 언급한 것처럼 '21세기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에 진출하는 데에도 기반이 된다.[51]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오랫동안 중국 내 중공업기지 역할을 했던 동북3성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흐름에서 뒤쳐지기 시작해서 중국 동남부 지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다.[52]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서도 동북3성은 비껴 있다. 동북3성의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와 성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만선련 지역은 바로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와 창지투(長吉圖) 개발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창지투 개발계획 자체에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53] 또, 동북3성 중 랴오닝성만이 유일하게 바다에 접해 있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두만강 하구 북러 접경지역에 의해 바다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중국이 북한의 나진 특구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유다. 만선련을 통해 동북3성 중 바다에 연해 있지 않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동해로 연결될 수 있다.

러시아에도 만선련 공생공간이 매력적일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처럼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의 심장부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54]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동북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새로운

47) 전홍진, 『동북아 공존공영의 신GTI구상』, 서울: 선인, 2022, p. 297.
48) 김석환, 『유라시아와 한반도203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4, pp. 180-182 참조.
49) 최재덕,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 정립의 필요성: 북방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회』34권 2호, 2019, p. 292.
50) 김영식, "극동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 113.
51)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2』,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 150-152 참조.
52) 강승호, "중국 경제와 동북3성."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 174-76; 차정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중국 지정학 전략의'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지속'을 중심으로." 『동서연구』31권 2호, 2019, p. 157.
53)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pp. 192-193; 강승호 "중국 경제와 동북3성," pp. 176-181.
54) 황원규, "환동해경제권의 이해," p. 59.

www.kci.go.kr

러시아 재건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55] 러시아는 북한 북동부 연안 특히 나진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진-하산 철도 연결 및 나진항 개발과 운용에 관여하여 왔다.[56] 특히 러시아는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개발을 도모하고 극동 지역의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 공생국가론'이 대표적이다. 수린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한 한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넘어서 자우랄리예(Zauralye, 우랄산맥 동쪽 지역)까지 한국인의 이주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57] 수린의 제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58]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만선련 공생공간 구상을 환영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선련 구상은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 북한은 2009년 GTI에서 탈퇴한 후에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GTI를 확장하여 중국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와 연결하면 북한이 역점을 두는 위화도(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만선련 구상은 북한-중국 사이의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온 쌍방향 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강승호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변경지역의 코우안(口岸, 변경세관)을 통한 접경지역간 쌍방향 경제활동이 활발한 점이다. 남북한 접경지역과 다른 점이다. 북중 접경지역간 변경무역과 함께 인적 거래도 형성되고 신용 거래 및 밀무역도 이루어진다. 북중 접경은 크게 신의주와 단둥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권과 나진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권, 양측 사이의 백두산 중심의 내륙 연결권으로 구분된다.[59] 북중 교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얼어붙었으나 최근(2026년 3월) 북중 교통채널이 빠르게 복

55) 김영식, "극동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pp. 104-109.
56) 윤민우, "소련·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 전쟁과 평화의 바다로서의 한반도 주변해역." 『평화학연구』24권 2호, 2023, pp. 45-46.
57) 수린, 블라디미르, "'코리아 선언': '한·러 공생국가' 건설을 제안하다." 블라디미르 수린 외,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공생국가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9, pp. 21-29.
58) 라종일, "세계 정치의 현실과 한민족의 진로." 블라디미르 수린 외,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공생국가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9, pp. 151-152; 김학준,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기원·전개·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서울: 박영사, 2024, p. 525.
59) 강승호, "중국경제와 동북3성," pp. 182-186.

www.kci.go.kr

원되고 있으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60] 만선련은 이처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북한-중국 및 북한-러시아 접경지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구상이다.

넷째, 만선련은 동북아 국가들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장차 동북아 안보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의 동(북)아시아 공동체나 평화체제 구상들은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다. 하지만, 국가 관계 수준에서 안보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지역 국가들의 체급 차이도 매우 크다. 만선련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가 하위 차원에서 각국 영토의 일부에 제한하여 평화와 번영 지대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만선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제·문화·사회 협력을 주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향후 만선련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동북아 평화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만선련을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탈근대적 공생공간으로 만들고, 관련국가들이 공동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림도 가능하다.

평화·공생공간으로서 만선련은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를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하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다. 탈냉전기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을 "연루 가능성을 낮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규정하였다.[61] 북한보다 남한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경유해서 대륙을 침탈하려는 일본 제국과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선련은 한반도 대신 만주와 연해주 및 북한 일부를 포함한 평화·공생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인접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충지대의 북진과 확대는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줄여줄 것이다.

60) 이정연, "'평양행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관계복원 속도 내는 북·중." 『한겨레』2026년 3월 20일.
61) 이승환, "탈냉전기 전후 중국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대(對)한반도 전략 변화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14권3호, 2023, pp. 1420-1422.

www.kci.go.kr

Ⅳ. 해양 방면 상상

앞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대륙 진출의 큰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여기서는 인도태평양을 해양 방면의 큰 그림으로 제안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선택적으로 편승하면서 우리의 해양 지정학 지평을 넓히는 방식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대륙 방면 서진 전략이라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해양 방면 서진 전략이다. 보다 가까운 목표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하나의 '동북아 지중해'로 상상하고 이를 평화와 공동 번영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 구상을 제안한다.

1. 인도태평양 전략 편승

노태우 정부 이후 북방에 대한 지정학적 상상이 어느정도 유유히 이어져온 것에 비해,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나 전략적 구상이 수립되거나 이어지지 않았다. 냉전 시대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구상한 바 있다.[62] 탈냉전 시대 김대중 정부가 동남아의 아세안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제기했으나,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으로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했지만, '신'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이전에 제대로 된 남방정책을 찾기 힘들다. 한국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양진출 구상을 시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2022년 말 공표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해양안보는 물론 사이버안보, 에너지,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지정전략의 지리적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63]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한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의 추종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64]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재편 시도 속에 깊숙이 연루되는 것을 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65]

---

62) 옥창준, "남방정책의 계보학: 아세아민족반공연맹부터 신남방정책까지." 『황해문화』 가을호, 2019, pp. 62-82.
63) 손열, 『개념전쟁』, pp. 291-304.
64) 이승욱,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공간과 사회』34권 1호, 2024, pp. 91-93.

www.kci.go.kr

주지하듯이,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주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겨냥한다.[66] 다만, 인도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대결과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67] 한국은 동맹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무시하기보다 함께 발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 다만, 인도나 아세안처럼 개방성과 포용성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에게 제일 큰 시장으로서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동북아 지역 안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의 시야를 인도양과 태평양 너머까지 펼치고 이를 통해 삶의 공간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동부 지역 등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곳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와 동남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도다. 인도는 인구대국으로서 그 자체로 커다란 시장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선진 기술과 학문, 영화 등에서 인도의 진출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무대에서의 무게도 남다르다. 냉전시대 인도는 비동맹운동을 이끈 국가의 하나다. 탈냉전시대에도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과 실리를 챙기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통상 협력을 유지했다. 2017년 파키스탄과 함께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OC)에 가입하기도 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으로서 인도와의 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68]

---

65) 주동진,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신아세아』30권 1호, 2023, pp. 82-83; 김성배 "지정학 전통과 한국의 지역 구상 검토," pp. 12-15.

66) 박재경, 『인도-태평양 패권경쟁: 외교현장의 인태해양국익과 신남방정책 대해부』, 서울: 인문공간, 2025, pp. 441-443.

67) Roy, Arijita Sinha, "해양 정체성 투사: 한국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 참여." KIMS Periscope, 414호, 2026, pp. 5-6; 오윤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30권 1호, 2021, pp. 86-87.

www.kci.go.kr

다음, 동남아시아다. 동남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길목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위치에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결성하여 상당한 경제 통합을 이뤘을 뿐 아니라 일정 부분 공동의 정치적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역대 한국 정부 중에서 동남아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은 한반도나 동북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구상하기보다는 동남아로 나아가서 '아세안+3'의 방식으로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EAC 구상은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한중일 3국 이외에 호주·뉴질랜드·인도를 추가로 참여시킨 '아세안+6'로 대응했다. 이같은 지역 구상 '개념전쟁'에는 중일간 경쟁이 바탕에 있다.[69] 한국으로서는 아세안+3이든 아세안+6이든 그 주도권을 아세안에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해 보인다. 다만 김대중이 EAC 구상을 동북아가 아닌 동남아를 기반으로 구현하려 한 깊은 뜻을 살펴야 한다. 기왕에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같은 다자안보무대를 구축한 아세안의 제도적 기반 위에EAC라는 하나의 공동의 집을 구상하고, 한-아세안 관계를 강화하여 공생공간 창출로 나아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 지중해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이 글로벌 차원의 비전이라면, 보다 가까운 목표로는 한반도 인근 수역을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상상을 시도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 인근 해역은 일본 열도에 의해 동과 남 방면이 사실상 막혀 있는 내해의 모습이다. 이를 '동북아 지중해'로 부르자.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와 서해의 바다를 나누지 않고, 동해와 서해 및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까지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내해로 조망하는 시각이다. 이같은 조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북

68) 김정곤·김경훈·백종훈·남유진·조원득,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p. 62, 165.

69)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42-49, 59-60; 손열, 『개념전쟁』, p. 194; 신윤환, "EAS의 발전과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 전략: EAS, 아세안+3, 아세안 문건들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32-355.

www.kci.go.kr

아 지중해'를 하나의 공간(바다)으로 보는 논의는 상당수 있다.[70]

이 글은 동북아 지중해를 하나의 바다로 보고, 한국이 앞장서서 이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동북아 지중해를 '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이는 신범식이 초국경 소지역협력 사업으로 소개한 환동해 소지역과 발해-황해 소지역을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을 구상하고 일부 실천하여 왔다.[71] 이를 종합하여 문재인정부에서 (1) 환동해 경제벨트와 (2) 환황해 경제벨트에 (3) 남북한 사이의 접경지역(DMZ) 평화벨트를 더해서 H벨트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72] 여기서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별도로 구분하는 대신에, 동북아 지중해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번영을 도모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이일영의 '한반도경제론'과 유사성이 있다. 이일영은 남북한 각각을 개혁하고 통합하는 '한반도경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동북아 지중해경제'를 같이 상상한다. 이 글은 이일영이 상정하는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공유하지 않고 동북아 지중해경제 개념만 가져온다. 동북아 지중해경제는 인천-개성-해주, 부산-광양-제주의 '소삼각' 네트워크, 인천-칭다오-다롄, 부산-후쿠오카-오사카의 '중삼각' 네트워크, 서울-베이징-도쿄의 '대삼각' 네트워크 등 여러 층위의 연결망으로 구성된다.[73] 이글은 이처럼 동북아 지중해를 하나의 경제권역으

70) 윤명철,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동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14집, 2006, p. 336;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델." 『아시아연구』19권 1호, 2016, pp. 38-40; 신명직, "분쟁의 동아시아 바다를'평화'와'공생'의 바다로." 『황해문화』 가을호, 통권 48호, 2005, pp. 78-104; Valencia, Mark J., "A Maritim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32, No. 4, 2006, pp.157-180; 옥한석,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한국문명의 가능성: 문화변동론적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21권 2호, 2018, pp. 65-86.

71)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참조.

72)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지정-지경학의 미래."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35-39; 신범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186-188.

73) 이일영,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네트워크 경제모델의 제안." 『동향과 전망』 84호, 2012, pp. 170-173.

www.kci.go.kr

로 상상하자고 제안한다. 기존의 동해권 및 서해(황해)권 발전 구상을 동북아 지중해 구상으로 통합한다.

한국은 동북아 지중해를 평화와 번영의 지중해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공생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동북아 지중해에서 한국은 중앙의 위치에 있다. 대륙과 해양의 중간이 아니라 동북아 지중해 바다에서 중앙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위치의 중심성은 기능의 중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위치의 중심성보다 기능적 중심성이 더 중요하다.[74]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중해 내 위치 중심성을 잘 활용하여 기능적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바다의 중심 위치에서 일본(섬)과 중국 연해지역, 북한과 러시아 연해지역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가 아니라, 바다와 바다, 연해지역과 연해지역(섬 포함)을 연결하는 기능적 리더십을 수립하고 행사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위치중심성을 바탕으로 기능중심성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동쪽으로 동북아 지중해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류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한중일러의 협력 속에 2004년에 속초-니가타-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동북아페리 항로가 개설되었고, 동해-시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의 크루즈페리 항로도 개설되었지만, 수익성의 저하로 운항이 중단되었다.[75] 한국은 일본과 러시아 극동 지역 및 북한, 그리고 만선련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중국 동북3성과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환동해권에 국한시켜서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동북아 지중해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연결한다.

서쪽으로는 발해-황해 소지역 협력사업을 서해와 동중국해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산·제주-오키나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이완과 홍콩·푸저우 또는 상하이와 연결하는 동중국해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열차 페리' 구상처럼 한국의 서해안과 산둥반도 및 랴오둥반도를 연결하는 해로를 발전시킨다. 박근혜 정부는 선박을 이용하여 해로로 북한을 우회해서 중국

74)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파주: 한울, 2014, pp. 126-128, 378-386 참조.

75) 안우철, "환동해지역의 물류."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 353; 황원규, "환동해경제권의 이해," p. 67.

www.kci.go.kr

대륙과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열차 페리는 화물열차를 통째로 배에 실어 상대국 항구로 이송하고 이를 다시 철도로 운송하는 방안이다.[76] 서쪽 방면에서 열차 페리 방법이 정착되면 동쪽 방면 러시아로도 확장할 수 있다. 산둥반도-요동반도-인천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도 상상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의 서해안에서 중국의 동해안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해저터널 구상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77] 중국은 2023년 5월부터 랴오둥반도의 다롄에서 산둥반도의 옌타이까지 해저로 연결하는 보하이 터널(다롄-옌타이 터널)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산둥반도와 한국의 서해안(ex., 인천)을 해저터널을 통해 연결하는 구상을 더할 수 있다. 해저·해상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과의 직접 연결은 한국이 북한을 거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접 서진하는 길을 열 것이다. 이는 우리가 대륙 진출을 위해서 바다를 통해 북한을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78]

둘째, 동북아 지중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구상을 수립하고 전파한다. 동북아 지역에 평화체제나 안보공동체를 수립하려는 기존의 논의들이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과 달리, 이 글은 평화 공동공간을 우선 바다에 국한해서 수립하자고 제안한다. 몽골을 제외하면 동북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바다에 접해 있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갈등축을 '대륙세력 vs 해양세력'으로 보든 또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으로 보든, 양 세력 사이에 바다가 존재한다. 미중경쟁도 주로 바다에서 전개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육지로 연접한 국가들이 아니다. 이들과 한국은 바다를 공유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평화의 지중해 구상은 주 접경지역인 바다를 공동의 평화공간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는 만선련처럼 국가들 사이의 접경 지역을 평화·공생공간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국가를 단위로 영토와 주권을 전부 다루지 말고 그 일부에 집중해서 공동의 평화공간을 만드는 방안이다.

동북아 지중해에는 국가간 갈등 요소들이 적지 않다. 쿠릴열도(북방 4개

76) 김창훈, 『한국 외교』, pp. 448-449.
77) 경기개발연구원 편, 『한중 해저터널의 기본구상: 21세기 동북아연결망』, 파주: 한울, 2010.
78) 또 하나 가능한 북한 우회 바닷길로는 일본을 통하여 대륙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일 해저터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연결하고, 일본 본토를 지나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경유하여 러시아 연해주 및 만주와 시베리아로 연결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는 북으로 진출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는 매우 어색한 구상이다. 한일 해저터널만 해도 대륙으로의 연결이 아쉬운 일본이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앞장설 일이 아니다.

www.kci.go.kr

섬), 독도, 다오위다오(센카쿠) 등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이 있고,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중첩하는 부분도 있다.[79] 미중 갈등 전선이 동북아 지중해로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냉전 시절 동해는 미국 본토와 서태평양 및 동아시아의 미군을 목표로 소련 잠수함들이 작전을 펼치는 공간이었다.[80] 2005년 '평화의 사명'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중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연합초계비행훈련을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곤 한다.[81] 이영형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축이 이미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동해로 이어지면서 확산되고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서 그동안의 양 진영의 세력권이 도전받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82]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도 동북아 지중해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2025년 11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동북아 지중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같은 달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2026년 2월에는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에 출격해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하면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83]

그렇다면, 한반도 인근 수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지중해를 어떻게 평화의 바다로 만들 수 있을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우선,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작전(훈련 포함) 활동에 대해 최소한 '사전 협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거나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방안도 강구할

79) 황원규 "환동해경제권의 이해," pp. 44-52.
80) 윤민우, "소련·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 pp. 38-39.
81) 강정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군사』, 122호, 2022, pp. 398-399; 김동찬·이장원, "미·중 패권 갈등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국제지역연구』 20권1호, 2022, p. 93; 송재익,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82) 이영형,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아태연구』20권3호, 2013, p. 41.
83) 양지호,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방공식별구역서 美中 대치," 『조선일보』, 2026년2월20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2/19/ZA2IRC4KJFCR5JQQTL3EN5FQ44/ (검색일: 2026.2.20).

www.kci.go.kr

만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처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다양한 협약들을 선례로 삼고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동북아 지중해에는 해양충돌을 방지하고 해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 협약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들 협약은 실제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평화의 바다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과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같은 다자협력무대가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84] 브라질의 주도로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해 1986년 결성된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ZOPACAS: Zona de Paze Cooperço Atlánico Sul)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ZOPACAS는 특히 브라질이라는 비패권국이 해양 안보와 생태 보전에 앞장서 평화 수역 구축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85]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가 강력한 평화 담론을 전개하고 평화의 바다 구상에 동의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강대국의 지정학 경쟁에 대한 대항지정학 담론으로 한국의 '평화외교(peace engagement)'를 제시한 김태환의 제안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강대국들의 지정학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의 가치와 지정전략을 따르지 말고 일종의 대항지정학으로서 평화외교를 전개하자고 주장한다(〈표 2〉 참조).[86] 앞에서 대륙으로 확장하는 평화·공생공간을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동아시아 지중해를 평화·공생의 바다로 구상하고 이를 대항지정학 담론으로 적극 전파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일본 등으로 하여금 동북아 지중해를 평화의 지중해로 만드는 구상에 합의하도록 평화외교를 전개하자는 것이다.

---

84) 신명직, "분쟁의 동아시아 바다를'평화'와'공생'의 바다로," p. 102; Valencia "A Maritim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pp. 161-162.

85) 이미정, "브라질 해양경제의 지정학: 파란 아마존(Amazônia Azul)과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ZOPACAS)." 『포르투갈-브라질 연구』20권1호, 2023, pp. 63-93.

86) 김태환, "대항지정학으로서의 평화외교," p. 242, pp. 253-262.

www.kci.go.kr

〈표2〉 강대국들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대항지정학(평화외교)의 가치와 담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가치와 담론	*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 '정상국가 (Normal State)' * '적극적 평화주의 (Proactive Pacificism)'	* '중국의 꿈(中國夢)'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강대국 지위 회복	* 러시아 정교회에 기반한 전통적 보수주의 * 강대국 지위 회복 * 유라시아주의	* 평화, 화해, 공생
공간적 실천 (geostrategy)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경제연합	* 만선련 평화·공생공간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

출처: 김태환 2019, "대항지정학으로서의 평화외교."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p. 241, p. 254. 일부 수정, 보완.

평화외교는 단순히 말잔치에 그치지 않는다. 애들러(Adler)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개념으로 설명한다. 실천공동체는 공동의 가치관이나 목표,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학습하고 자신의 실천을 변화시키며 그 경험을 공유한다. 실천공동체가 실제 국제정치 현실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1972년 미소간에 합의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들 수 있다. ABM조약은 미국에서 형성된 인식공동체에서 비롯했다. 핵무기의 파괴력과 취약성, 기습공격에 대한 상호 공포에 관심을 가진 일련의 과학자들과 전략가들이 미국 내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상호학습과 전파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인식공동체가 소련으로까지 확산되어 초국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것이 미소 간에 핵군축 협상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87]

한국도 평화의 지중해 담론을 확산하여 실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창비 중심의 동아시아 담론은 이웃 국가들 사이에 그 같은 담론공동체가 제한적

87) Adler, Emmanuel,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piste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05, pp. 13-15, 142-145. 이 점을 알게 해준 김태환 교수께 감사한다.

www.kci.go.kr

이나마 성공적으로 수립·확산된 하나의 사례다. 이 글은 동북아 지중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담론공동체를 수립·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 지중해를 평화와 공생의 바다로 만들자는 논의는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88] 가령 동북아 지중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 간 영토분쟁에 대해서 신명직은 국가 차원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만들어냈다. 그에 따르면, 쿠릴열도 4개 섬은 원래 (일본이 아니라) 아이누와 윌타, 니부프의 땅이었고, 센카쿠는 원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조공무역을 다니던 류큐사람들의 땅이었으며, 독도는 원래 (조선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산국 어부들의 쉼터였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에 대항하여 그 섬들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 입각한 담론이다. 신명직은 나아가 '동해'나 '일본해', '중국해'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명칭이 아니라 "평화와 공생의 바다"로 호명하자고 제안한다.[89] 담론과 호명이야말로 평화와 공생의 공동공간을 상상하고 창출하는 첫걸음이다.

V. 맺는 말

이 글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 확대를 지향하는 지정학적 상상을 시도했다.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고 우리는 이들을 이어준다는 '가교국가론'을 기각했다. 대신에, 한국 스스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복합화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륙과 해양 양면 전략을 취하되 대륙 방면 진출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대륙과 해양 진출의 거시적·장기적 방향으로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좀더 가까운 지정학적 과제로는 만선련 평화·공생공간 구상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중해' 구상을 제안했다. 이들은 각각 대륙과 해양 방면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평화와 공생의 공동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한국의 대륙 진

88) 신명직, "분쟁의 동아시아 바다를 '평화'와 '공생'의 바다로"; Valencia, "A Maritim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옥한석,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한국문명의 가능성."
89) 신명직, "분쟁의 동아시아 바다를'평화'와'공생'의 바다로," pp. 80-103.

www.kci.go.kr

출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을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왜 이같은 지정학적 상상을 시도하는가? 우리에게 지정학적 상상의 역사가 빈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고구려 패망 이후 우리는 한반도 안에 갇혀서 무수한 외침에 시달려왔다.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도 대외 팽창의 꿈은 거의 꾸지 못했다. 앞에서 만선련 지역이 우리와 연고가 많다고 했지만, 근래 우리 겨레가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은 지정학적 상상이 아니라 결핍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17세기 소빙하기 경신대기근으로 대규모 유랑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의한 북방 개척"이 일어났다.[90] 왜 우리는 주동적인 해외 진출의 역사와 상상이 없는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국적 팽창주의에서 자유로웠다는 임현진의 진단은 우리가 남의 것을 침탈하지 않는 평화애호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주지만, 한편으로 여전한 아쉬움을 남긴다.[91] 지정학적 상상의 빈곤은 어쩌면 우리에게 체화된 주변부 의식 때문이 아닐까? 조선은 천하세계에서 스스로를 '중화' 중국에 대해 '동번'(東藩)으로 규정하고,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다는 '벽재해우'(僻在海隅)나 '편방', '편소' 같은 주변부 의식이 강했다.[92] 주변부 의식은 일제 강점기 강조된 반도 의식으로 강화되고, 반도 밖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도적으로 상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남북 분립 이후 지정학적 결손국가에 갇혀 있으면서도 갑갑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글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을 시도한 근본적인 취지는 이 같은 주변부 의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동적으로 만드는 꿈을 꾸기 위해서다. 이것이 대외 팽창주의 노선을 주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넓히되 다른 집단들과 평화롭게 공생하는 공동공간을 창출하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글이 우리의 지정학적 상상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

90) 윤지환, 『한반도 지정학 프로세스와 문화 허브로의 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pp. 109-110.

91) 임현진, "왜 동아시아 공동체인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 임현진·이혜란 편저,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 파주: 나남, 2013, p. 31.

92)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pp. 125-126.

www.kci.go.kr

참고문헌

강승호, “중국 경제와 동북3성.”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 143-186.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강정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군사』, 122호, 2022, pp. 375-419.

경기개발연구원 편, 『한중 해저터널의 기본구상: 21세기 동북아연결망』, 파주: 한울, 2010.

고성빈,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비판이론의 탐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10호, 2007, pp. 17-48.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 2008, pp. 95-124.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8.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 김대중 전 대통령 주요 연설·대담 1998~2004』, 파주: 돌베개, 2004.

김대중,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파주: 한길사, 2024.

김동기, 『지정학의 힘: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세계사』, 파주: 아카넷, 2020.

김동찬·이장원, “미·중 패권 갈등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국제지역연구』 20권 1호, 2022, pp. 75-110.

김병익, “[특별기고] 한반도의 지정학: 건널목에서 알박이로.” 『한겨레』 2014년 8월 21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191.html(검색일: 2026.1.23).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파주: 한울, 2014.

김석환, 『유라시아와 한반도 203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4.

김성배, “지정학 전통과 한국의 지역 구상 검토: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 223, 2023.

김엄지·Sergei M. Smirnov·유지원·정다현·서자영, “광역두만지역(GTR)내 새로운 복합물류체계 개발 및 기대효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39권 3호, 2023, pp. 31-55.

김영식, “극동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 69-142.

www.kci.go.kr

김원수,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한국의 시각.” 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편, 『동북아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담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pp. 71-77.
김정곤·김경훈·백종훈·남유진·조원득,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서울: 문영사, 2000.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증보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김태환, “대항지정학으로서의 평화외교.”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225-273.
김학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집 2호, 2019, pp. 5-30.
김학준,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기원·전개·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서울: 박영사, 2024.
라종일, “세계 정치의 현실과 한민족의 진로.” 블라디미르 수린 외,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공생국가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9, pp. 135-154.
마한, 알프레드 세이어 지음,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서울: 책세상, 1999.
문정인,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동북아 협력 구상.” 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편, 『동북아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담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pp. 136-157.
박명림, “IT시대의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 동아시아 평화·인권·화해 중추국가의 비전과 구상,”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http://m.kisdi.re.kr/mobile/repo/res_view.m?key1=9829&key2 =0&key3=&category=30(검색일: 2019.3.18).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지정-지경학의 미래.”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26-50.
박영한, “분단국토와 남북한의 비교지리학 서설.” 『지리학논총』69호, 2023, pp. 71-95.
박재경, 『인도-태평양 패권경쟁: 외교현장의 인태해양국익과 신남방정책 대해부』, 서울: 인문공간, 2025.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박철희,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한국국가전략』 통권 15호, 2021, pp. 45-71.
박현옥지음, 김택균 옮김, 『자본의 무의식: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www.kci.go.kr

서울: 천년의상상, 2023
방호경·최보영, “광역두만강지역(Greater Tumen Region)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7권 3호, 2015, pp. 163-199.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28-62.
백영서,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파주: 나남, 2022.
백원담, “동아시아 담론 비판: 왜 동아시아인가?” 『실천문학』 겨울호 (통권 56호), 1999, pp. 323-385.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분리-통합'으로』, 서울: 사회평론, 2014.
손열, 『개념전쟁: 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까지, 강대국의 공간 지배 전략과 한국의 선택』,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3.
송재익,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7권 3호, 2021, pp. 105-131.
수린, 블라디미르, “'코리아 선언': '한·러 공생국가' 건설을 제안하다.” 블라디미르 수린 외,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공생국가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9, pp. 15-30.
수린, 블라디미르 외,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블라디미르 수린의 한러공생국가론』, 서울: 국학자료원, 2009.
신명직, “분쟁의 동아시아 바다를 '평화'와 '공생'의 바다로.” 『황해문화』 가을호, 통권 48호, 2005, pp. 78-104.
신범식, “북방정책과 한국·소련/러시아 관계.”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73-112.
신범식,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소다자주의 그리고 동북아 지역정치 변동.”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통일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7, 228-255.
신범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pp. 173-224.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서울: 이조, 2020.
신윤환, “EAS의 발전과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 전략: EAS, 아세안+3, 아세안 문건들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32-355.

www.kci.go.kr

신성호,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파주: 21세기북스, 2025.
안우철, “환동해지역의 물류.”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293-369.
양지호,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방공식별구역서 美中 대치,” 『조선일보』, 2026년 2월 20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2/19/ZA2IRC4KJFCR5JQQTL3EN5FQ44/(검색일: 2026.2.20).
오윤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30권 1호, 2021, pp. 77-106.
오타 야스히코 지음, 임재덕 옮김, 『2030 반도체 지정학』, 서울: 성안당, 2022.
옥창준, “남방정책의 계보학: 아세아민족반공연맹부터 신남방정책까지.” 『황해문화』 가을호, 2019, pp. 62-82.
옥한석,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한국문명의 가능성: 문화변동론적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21권 2호, 2018, pp. 65-86.
윤명철,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서울: 고래실, 2004.
윤명철,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동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14집, 2006, pp. 323-357.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모델.” 『아시아연구』19권1호, 2016, pp. 21-46.
윤민우, “소련·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 전쟁과 평화의 바다로서의 한반도 주변해역.” 『평화학연구』24권 2호, 2023, pp. 29-56.
윤여일, 『동아시아 담론: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파주: 돌베개, 2016.
윤재운, 『발해로드: 당, 거란, 신라, 일본으로 가는 길』, 고양: 평사리, 2026.
윤지환, 『한반도 지정학 프로세스와 문화 허브로의 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파주: BookStar, 2018.
이미정, “브라질 해양경제의 지정학: 파란 아마존(Amazônia Azul)과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ZOPACAS).” 『포르투갈-브라질 연구』20권 1호, 2023, pp. 63-93.
이승욱,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공간과 사회』34권 1호, 2024, pp. 69-106.
이승환, “탈냉전기 전후 중국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대(對)한반도 전략 변화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14권 3호, 2023, pp. 1413-1428.
이영형,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아태연구』20권 3호, 2013, pp. 35-67.
이일영,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네트워크 경제모델의 제안.” 『동향과 전망』84호,

www.kci.go.kr

2012, pp. 160-192.
이정연, "'평양행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관계복원 속도 내는 북·중." 『한겨레』2026년 3월 20일.
임덕순, 『정치지리학원리: 이론과 실제』, 2판, 서울: 법문사, 1997.
임현진, "왜 동아시아 공동체인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 임현진·이혜란 편저,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 파주: 나남, 2013, pp. 19-52.
장덕준, "'북방정책' 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재검토 및 새로운 대륙지향 정책을 위한 원형 모색." 『슬라브학보』32권 1호, 2017, pp. 277-318.
장덕준,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아관파천에서 신북방정책까지』, 서울: 역사공간, 2021.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전홍진, 『동북아 공존공영의 신GTI구상』, 서울: 선인, 2022.
제성훈, "북방정책 35년 평가와 뉴노멀 시대 한·러 협력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27권, 2023, pp. 43-61.
주동진,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신아세아』 30권 1호, 2023, pp. 49-92.
차정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동서연구』31권 2호, 2019, pp. 139-167.
최영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27권 2호, 2021, pp. 163-188.
최재덕,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 정립의 필요성: 북방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회』34권 2호, 2019, pp. 279-308.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조선의 과거·현재와 장래』, 서울: 건국사, 1947.
함명식,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중소연구』45권 2호, 2021, pp. 7-41.
황원규, "환동해경제권의 이해." 강승호 외, 『환동해경제론』, 개정판, 서울: 두남, 2021, pp. 25-67.
Adler, Emmanuel,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piste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05.
Hafeznia, Mohammad Reza. "Active Geostrategic Faults in the World." *Geopolitics Quarterly,* Vol.12, No. 4, 2017, pp. 1-12.
Mackinder, Harold J,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A study in the Politics of*

www.kci.go.kr

Reconstruc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19.

Roy, Arijita Sinha, "해양 정체성 투사: 한국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 참여." *KIMS Periscope,* 414호, 2026.

Spykman, Nicholas John, *The Geography of the Peace.* Edited by Helen R. Nicholl. [S.I.]: Archon Books, 1969.

Valencia, Mark J., "A Maritim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 32, No. 4, 2006, pp. 157-180.

www.kci.go.kr

Abstract

A Geopolitical Imagination of South Korea: A Sketch

Kim, Haknoh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sets out to develop a geopolitical vision that aims to enlarge the living space available to Korean compatriots,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explor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vision. I begin by rejecting the 'bridge state theory', which assumes that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meet on the Korean Peninsula, giving Korea a role in connecting them. Instead, I propose that South Korea promote a 'strategy of compounding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whereby South Korea herself becomes a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 prioritizing advancement into the continent. Secondly, I present a plan for entering the continent. In the long term, I propose building on and developing the 'Eurasia Initiativ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an attempt to succeed the Northern policies of the preceding Korean governments. In the short term, I suggest creating and expanding spaces for peace and symbiosis centered on the border areas of Manchuria, Primorye and the northern parts of North Korea. Thirdly, I develop a maritime strategy. On a global scale, Korea should engage with and leverage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hile avoiding becoming embroiled in the US–China conflict. In the short term, I propose viewing the East, West and South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China Sea as one Mediterranean Sea and establishing, disseminating and implementing the concept of 'Northeast Asia Mediterranean for Peace and Prosperity'.

Key Words: Geopolitical imagination, bridge state theory, land power, sea power, space of peace and symbiosis, Northeast Asia Mediterranean

투고일: 2026년 06월 10일, 심사일: 2026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6년 08월 03일

www.kci.go.kr

www.kci.go.kr